

데스크 시각

광주 문화수도에 '꽃피는 봄' 오나



윤 영 기 문화미디어부장

문화전당에 '꽃피는 봄'이 올 것 같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로라면 말이다. 너나없이 광주 표심을 얻기 위해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거론하고 있다. 유력 주자들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정상화'를 약속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세계적 창조 허브도시로 육성한다'고 공약했다. 광주 속원사업을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국책 사업'을 아직까지도 후보들이 들먹이는 현실이 환원 못내 쓸쓸하다.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 대척점에 섰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묵살하고 방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에 와서 공약으

로 새삼 등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업이 완료됐더라면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비금가는 새로운 공약이 하나 더 추가됐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공약 좋지만 실천 의지 중요

그래도 대선 후보들의 문화수도 공약에는 지역의 여망이 희미하게나마 담겨 있어 다행이다. 그 요체는 법적·제도적 틀의 보완과 재정비로, 핵심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의 손질이다. 특별법은 광주 문화수도에 걸맞은 인프라 등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는 광주 전역을 문화전당권(동구), 아시아 전승 문화권(남구)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의 7대 문화권 사업도 포함돼 있다. 문화전당은 문화전당권에 포함된 하나의 인프라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규모가 방대하다.

그런데 7대 문화권 사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일 정도로 진척되지 못했다. 문화전당 건립이 유일한 정도다. 이런 상태에서 오는 2026년으로 못 박은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이 기간에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완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특별법 시효기간 연장을 촉구해 왔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31년, 문화수도조성사업의 목표기간을 2023년에서 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실천이다. 비록 헌신처럼 버텼지만 문화수도 공약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한 바 있다.

제도적 정비에 관해 하나 더 확인해 두고 싶은 게 있다. 7대 문화권 사업을 뒷받침할 재원의 분배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 국책사업이면서도 7대 문화권 사업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재원 조달 방식이다. 걸림돌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와 광주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5대5 매칭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비가 총 200억 원이라면 정부가 100억 원, 지자체도 1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문제이다.

국비 지원 방식도 개편해야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줘도 재정 형편이 열악한 광주시로서는 자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처럼 정부가 전적으로 조성 비용을 대든지, 광주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대폭 낮추면 될 일이

다. 후보들이 이런 알맹이를 포함하지 않고 7대 문화권 사업을 거론한다면 결국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주에서 법적·제도적 틀을 굳이 요구하는 이유는 폐단을 '학습'한 바 있고 이를 통해 얻은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라는 근거가 있어 그러나 짙금 예산이라도 문화전당과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지원됐다. 이러니 광주에서 법과 제도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는 9일이면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뽑힌다. 새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조심스럽지만 박근혜 정부에도 벤치마킹할 정책은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허울뿐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문화융성 정책은 형식과 내용은 바뀌더라도 계속됐으면 한다. 그 고갱이에 해당하는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우뚝 서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소 늦었지만 문화전당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은펜칼럼

남북문제 대화로 풀어야 한다



김 병 인 서영대 교수

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한반도 정세는 도발과 대결의 연속이었다. 대화는 실종되고 남북 대결이 끝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남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과거에 매달리던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렵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원인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의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분명하다. 유엔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제재도 한반도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은 남북한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다.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면 뭘수록 해결의 길은 멀어진다.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남한은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

과거의 경험으로 봐도 압박과 제재만으로 북핵문제를 풀 수는 없다. 상당한 기간 동안 북한을 압박했지만 효과는 미비하고 한반도정세의 긴장 수위는 높아만 갔다. 또 군사적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한다면 한반도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현재 남한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남북한 쌍방 모두 자제해야 한다. 서로 자극하는 연행을 삼가고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착실히 진행하고 남한도 대규모로 군사행동을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보다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현재 한반도의 긴장은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 비방하고 대결하는 연행은 이미 충분히 들었다. 많은 사람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인 대화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북한에 대한 대화 가능성도 보이기 시작한다. 언론에 의하면 렉스 틸러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과 인터넷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틸러스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의도가 있는지, 또 그것이 미국의 목표인지를 묻는 질문에, "분명 그렇다"면서 "바로 그것이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대답했다.

틸러스 장관은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체제 보장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에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은 북한 정권의 붕괴나 한반도 통일 가속화를 추진하지 않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틸러스 장관이 미·북 직접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분명한 변화이다. 중국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6자회담을 비롯한 이 해당사국 간의 대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변 강대국들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틀을 만들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여러 강대국과 복잡하게 얽혀있어 일시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극복해야 할 문제들도 너무나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전쟁보다는 평화로 해결되는 대화가 좋다는 정당한 인식을 갖고 인내하면서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서 꾸준한 대화만이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차기정부는 이른 시간 안에 대화를 재개하여 민족문제를 민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를 바란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국가대개혁을 위한 정부 구성안 사전 공개해야



정 운 채 민주인권평화100만국민연대 SNS그룹 관리인 대표

주자들은 거리와 시장에서, 노인복지·아동수당·청년수당 등으로 표심 얻기에 급급해 '현금짜주기'식 공약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신화보 대책도, 경제성장동력 확보전략도 없습니다.

호객행위는 더욱 진화합니다. 국민통합을 앞세워 유권자인 국민의 지지기반을 토대로 권력을 나눠먹겠다고, '통합정부' '공동정부'를 들고 나옵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또 다른 호객행위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근본은 다양한 가치와 시각의 공존을 지향합니다. 선거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대선은 시대적 가치와 시대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다수결로 최종 합의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대선에서 최종 합의된 시대적 가치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기 위해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합의해 나가는 것이 대의정치입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영도력에 의한 인치(人治)가 아닌 사회적 자본인 법과 제도에 의한 법치(法治)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통합'은 '인치'로, '다양한 가치'는 '법치'로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법치는 보통사람들이 같이 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미국민을 8년 동안 주인으로 모셔온 큰 일꾼 오바마

가 퇴임 때 60%의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소애 한국민의 교육열을 부러워했고, 존경했다고도 합니다.

우리 한국민의 큰 일꾼 노무현은 오바마보다 10여 년 전에 이미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실토했면서, '통치'보다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면서 보통사람들과 소통하려 했던 것입니다.

세계인은 1600만 촛불이 이뤄낸 광장 민주주의를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불가사의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등교육 이수율 세계 1위, 인터넷 활용률 세계 1위를 달리는 5000년 문화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오바마보다 10여 년 먼저 깨달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3류 정치' 정치권만 그 신뢰가 OECD 최하위를 넘어 세계 최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필자는 세월호 참사의 참혹상을 보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여당을 뽑아도, 야당을 뽑아도 걱정 없는 세상' '국민이 지배가 아닌 섬김의 대상이 되는 나라'를 국민이 직접 만들어 후세에게 물려주자, 정치가 싫다고 주인 역할마저 안한다면 국민은 결국 노예가 된다는 취지의 목적활동으로 2014년 8월 4일부터 '민주인권평화100만국민연대'라는 페이스북 공개그룹을 개설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보통사람들이 함께하는 민주주의, 나아가 진정한 법치주의 나라에 도전할 수 있는 국민은 우리 민족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1600만 촛불민심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600만 촛불민심은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이끌어냈고, 후사를 정치권과 국회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유력 대선 주자들은 '이게 나라냐', '국가대개혁 하라'는 국민의 염원인 시대정신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여 하는 수 없이 비상수단으로 유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대개혁을 위한 3대개혁입법(권력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징벌적손해배상제·의무이행소송제) 국회 합의 통과' '3대개혁입법 추진할 '통합정부', '공동정부' 구성안을 사전 공개하라'는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광주일보 4월24일자 3면·5월2일자 5면 광고문 참조).

대선주자들은 이제 국민 88%가 염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위한 3대 개혁입법을 추진할 정부 구성안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 과정이 곧 선거운동이 되도록, 유권자인 국민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1600만 촛불이 명예혁명의 완결성이 확보될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호남인의 역할입니다.

社 說

건전보수 재건의 꿈 이대로 무너지는가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어제 집단 탈당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자신의 당 유승민 후보에게 보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한다. 탈당 의원 중에는 권성동·김성태·장제원·황영철 등 청문회 스타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바른정당을 떠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안보가 위급하고 중차대한 때이며, 이런 상황에서 보수 대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른정당은 애초 33명에서 이미 탈당한 이재준 의원을 포함해 14명 의원이 빠져나감으로써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지난 1월 24일 창당 이후 100일도 못 돼 사실상 당이 쪼개지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정치권에서 또다시 철새 행태가 나타났다고 해서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국민은 선거 때만 되면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해 위해 이합집산하는 철새 정치에 신물이 난다. 다만 건전한 보수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던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극우 편향인 자유한국당으로 몰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내는 국민이 적지 않다. 친박 세력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입지를 공고하게 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과 몇 달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열에 동참하고 당을 새로 만들어 걸친한 보수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등 대안세력을 자처했던 인물들이다. 그들이 이제 다시 한국당(옛 새누리당)의 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국당 내 친박 세력들이 이들을 선별 복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바른정당이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성장함으로써 국내 정치가 재편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집권 가능성이 큰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기대했던 국민도 적지 않다. 민주주의는 적을 인정하고 안고 가야하는 정치제도다. 보수와 개혁·진보세력이 건전하게 양립해야 정치가 발전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 탈당사태로 한국 정치에 신물이 난다. 다만 건전한 보수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던 바른정당 소속

주민 위주 행정의 본보기 동구에서 배워라

20년간 변함없던 광주시 동구 쓰레기·분노수거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도로가 깨끗해지고 민원 처리가 빨라졌다고 한다. 주민들의 칭찬과 격려가 북물을 이루면서 타 자치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 동구청은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은 생활폐기물과 분노처리 대행업체 계약을 올해 처음으로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은 28년, 분노처리 대행은 22년간 특정업체가 독점해 왔다. 특정 업체의 독점은 여러 가지 폐해를 낳았다. 분노업체의 경우 정화조 청소 민원을 접수하고도 한 달이 되도록 처리 하지 않아 주민이 화장실 역류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는 관급 쓰레기봉투만 가져가고 주변에 흩어진 잔재물은 방치했다.

다행히 김성환 동구청장이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자'며 용기를 냈고,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계약으로 바꿨다. 또 담당 구역을 동구 전역을 선정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장동·동명동 등 그동안 민원이 빚발처럼 거리가 깨끗해지고 항의 민원도 대폭 줄어들었다. 예산 2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까지 있었다.

광주의 다른 자치구도 쓰레기·분노수거 상황은 동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관행에 얽매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편 동구청의 용기 있는 결정이 타 자치구에도 변화의 바람으로 작용돼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반려동물(pet)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아이 대신 동물을 키우는 '펫맘족'(pet+mom), 결혼 대신 혼자 동물과 사는 '혼펫족'. 모두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벗어 낸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일컫는 신조어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에 달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마음 잡기가 한창이다.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완주방향)에는 얼마 전 국내

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공감대가 좁아지는 추세이지만 동물 이미지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노년층까지 확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대선 후보들은 이른바 '펫심'(pet+心)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풍산개와 길고양이를 키우는 문제인 후보는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등 5대 공약을 내놓았고 안철수 후보는 유기견 입양과 개 식량 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완주방향)에는 얼마 전 국내

대선과 펫심(Pet+心)

반려동물 종합 의료보험제 카드를 꺼내 들었고 심상정 후보는 한의견(義) 고장으로 유명한 임실군 오수면의 이미지를 살려 만든 것으로 반려동물이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휴게 공간, 놀이시설 등이 갖춰져 '펫 테마파크'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수조이다.

반려동물 주인들의 마음 잡기는 대선 과정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아이 대신 개나 고양이와 안고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많다. 동물을 사랑한다는 이미지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를 초월할 수 있어 표심 얻기에 좋은 텃밭이다. 아이

반려동물 종합 의료보험제 카드를 꺼내 들었고 심상정 후보는 한의견(義) 고장으로 유명한 임실군 오수면의 이미지를 살려 만든 것으로 반려동물이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휴게 공간, 놀이시설 등이 갖춰져 '펫 테마파크'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수조이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전통처럼 됐다. 통상 개를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퍼스트 도그'라고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아이 대신 개나 고양이와 안고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많다. 동물을 사랑한다는 이미지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를 초월할 수 있어 표심 얻기에 좋은 텃밭이다. 아이

미국에선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전통처럼 됐다. 통상 개를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퍼스트 도그'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the newspape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